

경마 레저세 인하하여 농어촌사업재원 확충해야

국회의원 **홍문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한·미 FTA 협상의 진전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농축산업 분야는 시장의 붕괴와 농업 구조조정의 압력으로 인한 불안으로 산업기반 자체가 도산의 위기감에 싸여 있다.

이미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불균형 성장 정책의 결과로 농촌 경제가 침체되고 지역공동화 현상까지 심화된 형편이어서, 한·미 FTA가 몰고올 파괴력은 농축산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지지기반인 KRA(한국마사회)의 경마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농축산인들의 앞날에 암울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 해 KRA가 농어촌사업재원(농어촌특별세, 특별적립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1,875억원이다. 반면 지방세인 레저세, 교육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그 4배가 넘는 8,248억원에 이른다. 특히 기금조성에 있어 KRA의 출연금 비중이 96%인 축산발전기금의 경우, 경마매출의 감



소와 과도한 지방세 납부로 2002년 1,834억원이던 KRA의 출연이 2005년에는 675억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주객이 전도된 과도한 지방세 부과

KRA는 한국마사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마사의 진흥과 축산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농림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장이 과천시에 위치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치 설립목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기여로 전도된 듯한 이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즉, 경마매출에 부과되는 발매세금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 수도권 및 지방도시에 집중되어 지방세의 농어촌재정 기여는 미미한 실정이다.

더욱이 현행 고율의 발매세율은 경마고객에 대한 환급률의 저하로 이어져 불법사설경마의 조장 요인이 되고, 경마고객을 스크린경마와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게임으로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KRA 매출 감소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니, 경마에 부과되는 과도한 지방세는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가 틀림없다.

경마산업의 취지는 농축산업 발전

경마산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과다한 레저세(매출의 10%)와 지방교육세(6%)의 비중을 대폭 낮추고 마사회도 소득금 중 농어촌으로 돌아가는 특별적립금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농어촌사업 재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농축산업의 앞날을 염려하는 본인을 포함한 14명의 국회의원들은, 경기도 등 이해관계가 얽힌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반대를 무릅 쓰고 지난해 12.6. 어렵사리 경마 레저세의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경마 레저세가 인하되면, 부수적인 효과로 경마고객의 불법사설경마 등으로의 유입이 저지되어 건전경마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고, 나아가 경마매출의 증대를 통한 농어촌사업재원의 추가 확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농어촌이 살아야 도시도 번영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상으로 우리 농축산업이 누란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경마 레저세 인하를 위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인식과 절대적인 지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한농연과 전농 등 25개 농축산단체로 구성된 건전경마추진위원회를 비롯하여, 농림부, KRA, 경마유관단체 등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우리 농축산업의 생존을 위해 금번의 법안이 국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다.